



삼각축이 흔들린다… 실물경제 깊은 ‘침체 신호’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엔진인 ‘소비·투자·수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올 1월까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선 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분기를 지나면서 그 수치는 0%대로 수직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제대로 반등하지도 못했다. 사실상 1년째 ‘0’ 성장의 울가미에 갇힌 경제 상황속에서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은 극도로 치솟고 있다.

◆성장동력 직격탄 맞은 산업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맞은 뒤 또다시 뒷걸음질했다. 바닥까지 꺼진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장률 1년째 0%대, 반등동력 없어
산업 생산·소비 지표 동반 약세 지속
수출 부진에 투자 위축까지 ‘가속화’
실물경제 전반 얼어붙으며 활력 저하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기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실적 하락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내수에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한 16만636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다양한 신차를 내놓은 상황에서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역풍을 맞아 아쉬운 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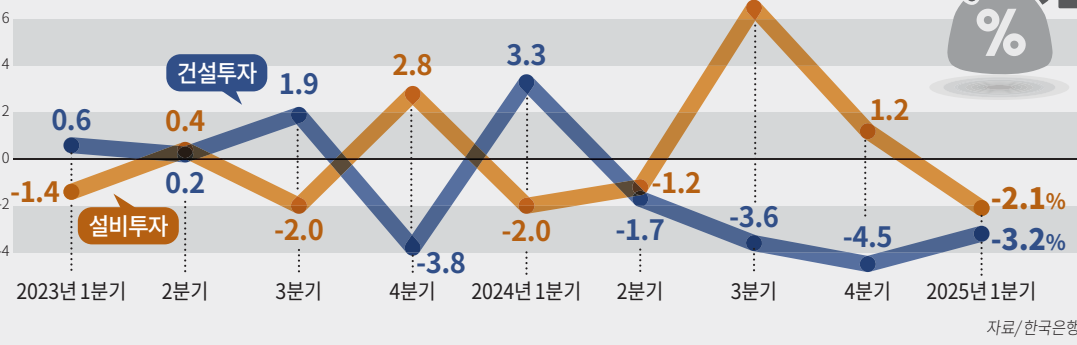
기아는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내수에서 2.3% 줄어든 13만4412대를 팔았다. 같은 기간 한국GM(캐딜락 제외)은 내수 시장에서 40.6% 감소한 4108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KG모빌리티도 내수 실적은 좋지 않다. 올 1분기 내수 판매는 33% 쪼그라든 8184대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전자업체들도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잠정실적에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DX, DS 등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가전 등에서 내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지출 중 투자 증감 추이

단위: %, 전기 대비



경기침체는 물론 경쟁사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LG전자도 지난 24일 올 1분기 경영실적으로 매출 22조7398억원, 영업이익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LG전자는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전 구축 사업이 2년만에 매출 2조원을 넘어서자 태국·말레이시아·대만에서 올해는 인도와 실가포르·홍콩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재 수입 증가로 내수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제철소 설비 중단과 폐쇄를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 제철소 1제강공장, 11월에는 1선제강제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현대제철도 가동률이 떨어진 포항 2공장을 지난해 말 축소 가동하고 4월 한 달간 인천공장의 철근 제품 생산라인 운영을 중단했다. 국내 1, 2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내수침체를 피해 해외 투자와 설비 이전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주력 사업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가 모두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소비 침체에 유통가 줄도산 위기…서민 부담 가중

극심한 경제 침체에 가성비와 실속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식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유통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5로,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실물 경기의 깊은 침체를 방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3.6%, 3.0% 상승했다. 침체 경기에 소비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펼쳐지면서 소비자들은 외식 횟수와 반찬 수를 줄이는 등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도 저가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강화에 나서며 보수적 대응중이다.

소비 위축은 유통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미정산 사태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명품 온라인 쇼핑몰 발란도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료와 금융비용 증가로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기업 그룹들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그룹은 유통성 위기설 이후 비핵심 사업 매각에 나섰고, 애경그룹도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역성장 경기에 유통업 침체, 투자 위축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수요-공급-투자 삼각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 주요 식음료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환타 등의 출고가를 평균 5.5% 인상하며, 매일유업도 컵커피와 치즈, 두유 제품 출고가를 평균 8.9% 올릴 예정이다. hy(구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하림은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각각 인상한다. 저가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도, ‘생활물가’ 항목들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서민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격 인상에도 식음료업계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2.8% 감소할 전망이다. 롯데푸드 역시 매출은 소폭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32.9%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팜유와 코코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등했고, 환율도 6개월째 1400원대에서 등락하며 수입 비용을 가중하고 있다.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유통재고 소진 이후에야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소비 둔화,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 깊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고환율 등 불확실성에 기업투자도 위축
기업의 투자도 줄었다. 고(高)금리와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인상과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기준 3.2%(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 고환율은 원자재 가격을 높였고, 그 해 하반기 진행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은 수주·허가·착공을 어렵게 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한데다 구조조정과 미분양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가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 2국장은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의 주된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장기 고금리상황,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기업의 투자계획도 미루거나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12월 365.14를 기록했다. 10년 전(107.76) 대비 3.4배로 커졌고, 한일무역분쟁이 격화했던 2019년 12월(538.2) 이후 60개월 만의 최고치다.

고물가·고환율 여파, 불확실성 심화
기업 투자심리 위축, 소비감소 본격화
유통업계 연쇄 부실, 내수 침체 악화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 커지는 상황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니콜라스 블룸·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등 석학 3명이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별 주요 언론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약 6개월 뒤 국내 설비투자가 8.7%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난 12월 치솟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감소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지속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성장률이 대내외 불확실성확대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한파·산불 등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며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신원선·나유리 기자 ysw@metroseoul.co.kr